

‘與 추천 제외’ 상설특검·국회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野, 특검후보추천위 국회 몫 차지 민주당 2명, 제3정당 각 1명씩 추천 규칙 개정안, 통과 후 바로 시행 법률안 2개는 거부권 행사 전망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 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에서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특별 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사위 까지 통과한 2개의 법률 개정안과 1개의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 가운데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특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매년 12월 1일까지 예산안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해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11월 30일을 경과하여 계속 심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것과, 동행명령 대상·증인의 범위를 현행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전심사 및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을 제외한 2개의 법률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어도 정부 여당의 반대가 극심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전 과정 지원 강화”

(조산아·저체중 출산아)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 모자료센터 설치로 인력확보 도와 의료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김준영(왼쪽 두번째), 사공혜란(왼쪽 세번째) 부부의 다섯쌍둥이 중 막내인 김새봄 아기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출생한 조산아·2.5kg 미만 저체중출산아)들이 있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원책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등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이곳에는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다.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은 지난 10월 제주대병원 이후 한 달여만이며,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13번째다.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집중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료센터를 지역·권역·중앙3단계에 걸쳐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 따르면,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3단계인

중앙중증모자료센터에서 담당한다. 중앙중증모자료센터는 내년 3월을 목표로 2개소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임산부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료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유 수석은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현행 300만~1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 수석은 “1kg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서울·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기한을 출산 예정일 또는 퇴원 시점 기준으로 조정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의료진 지원도 강화한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 등 고난도 의료행위에도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한동훈 “STO 제도, 늦지 않게 내놓아야”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 “찬반 단계 지나… 현실의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28일 STO(토근증권발행·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해 “이를 허용하나 마느냐의 찬반의 문제 단계는 지나갔다”며 “찬반의 문제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의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디지털자산 STO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거래, 이용자 불편 등에서 이용자가 제대로 보호받게 철저히 준비하고 거기에 걸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이 STO 도입을 착실하게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용자 보호안을 담은 제대로 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 등 기존(제조업) 강국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이런 음식들이 많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자랑스런 일이지만 그만큼 만든 음식을 잘 팔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이 금융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STO도 발전 방향 중에 하나란 의미로 토론회가 열렸다”며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할

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실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등 규제 차원으로 너무 발목잡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현실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좋은 방향을 찾으려한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STO 관련한 법적 인준비가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위 소속인 김 의원은 ‘STO 제도 화폐키지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STO 시장에서 법제화 미비가 큰 걸림돌로 작용한 가운데, 이번 기회로 법제가 정비될 경우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자산을 쪼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게 된다. /박태홍 기자

李, ‘尹 임기단축’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이명박 정부)

李 “정치보복 고리 끊는 것 당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표적인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복수의 정치, 정치보복을 끊겠다고 선언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 식당에서 이 변호사와 오찬하기 전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석연 변호사는 조선일보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정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고,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선 윤 대통령이 현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개헌안을 대통령 스스로 발의해

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양형이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님이 합리적 보수를 대표하는 분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의 핵심 가치가 규칙을 지키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만들어진 규칙을 지키는 것, 합의된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보고 보수주의자라고 하는데, 저는 진보와 보수에 관심이 없다”라며 “헌법적 자유주의자라고 정권을 불문하고 말했고, 틀에서 벗어나면 소신에 입각해서 발언해 왔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